

<공용수용의 당사자-관계인>	
1.관계인의 의의 (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)	
①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, 저당권,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. (다만, _____ 권리를 취득한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함.)	
2.관련 판례	
<판례>는 관계인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가진 자 뿐 아니라,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보기 거래관념상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수거, 철거권 등()을 가진 자도 포함한다고 한다.	

<공물의 수용 가능성>	
1.문제점	
토지보상법 ()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, 공용폐지가 없더라도 공물인 상태로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. 즉 “()”의 해석 문제이다.	
2.학설	
①공정설은 공익사업시()가 불요하며, 동법 제19조 제2항의 ‘특별한 필요’의 해석을 기존사업의 공익성보다 신사업의 공익성이 더 큰 경우를 말하며, 이를 ()해야 한다고 본다. ②부정설은 공익사업시 ()가 필요하며, 동법 규정의 ‘특별한 필요’는 ()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.	
3.판례 및 검토	
대법원은 ()고 하여 공적 보존물이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. 생각건대 사업에 있어 더 큰 공익이 요구되는 경우 목적달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긍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.	

